

도의회 예결특위, 전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총 규모 6조9243억원, 1회 추경예산보다 2255억 증액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 의원)는 전라북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로 전라북도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6조9243억원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사업(450억원)'에 대한 필요성, 운영계획 미수립, 행사 후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됐지만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토록 당부하며 원안 가결했다.

또한 복지여성보건의 미세먼지대책 일환으로 편성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16억5400만원)'의 경우 응기변적인 사업으로 효과성을 지적하였으나 저소득층의 마스크 구입 부담 경감 및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했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환경녹지국의 '미세먼지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사업(2억원)'은 미세먼지 발생사업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방·감시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삼임위원의 언어예결위 의결로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이번 전북도의 2회 추경

이 1회 추경 이후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 변동사업 및 지방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도민생활의 안정과 환경,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심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황의탁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에 일련의 경제보복,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우리도민의 생활안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도민의 생활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민형 기자

“2024년까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소 목표”

이낙연 총리, 행안·산자부 주관 안전산업박람회서 “안전·안심 사회 노력 가속화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사고 사망자를 40% 줄이려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안전·안심 사회 실현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올렸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산업재해 및 자살로 인한 사망을 절반으로 낮추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와 산재 사고는 지난해보다 9.2%와 7.6% 줄었고, 자살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은 우리의 대응역량 향상을 드러냈고 메르스,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같은 감염병도 매우 성공적으로 막았다”며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최단 기間に 최소 지역으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안심 사회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안전 기본법’을 제정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약자를 보호하고 전자지도 기반의 통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 대응능력을 한층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를 위해 노후한 철도, 교량, 항만, 댐 등 시설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32조원을 투자해 개보수하고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안심 사회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욕적 노력이 안전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기관들이 기술과 사업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함께 도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전산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공동 주최로 열린다. 올해는 ‘4차산업 혁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한 안전기술과 제품 등이 소개됐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소부장특별법 당론 발의할 것... 극일자강 지원”

민주 이인영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은 내후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해 극일자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정비하겠다”며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고 당론으로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법무처 현장 지원단 ‘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지원센터’가 마련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곧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도 출범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비전의 골격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강화 등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주제 유엔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비무장지대 안에 유엔 기구들을 주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갈 경우 국제사회가 국제평화지대 구축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며 “남·북 간에 평화와 협력의 북반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제 중 유엔기구나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는데, 한국군

한반도 문제 풀기 위한 전쟁 불용·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의 원칙도 제시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엔지뢰평화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 제거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순히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갈수록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해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시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다”며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 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

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과 남북미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한반도 평화 구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북미가 대화를 통해 더 큰 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세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는 전쟁 불용의 원칙”이라며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이라며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셋째는 공동 번영의 원칙”이라며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3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장학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의회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